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

의안번호	제15호
------	------

##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조용훈 의원 등 8명
제출연월일	2024. 2.

#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5호
------	------

발의연월일: 2024. 2. 21.

대표발의자: 조용훈

공동발의자: 김남충, 조배식  
서승필, 홍태의  
허명숙, 이상구  
윤금숙

## 1. 제안이유

논산시민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안전보험 및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피보험자의 자격(안 제4조)
- 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안 제5조)
- 라. 보험금 청구 및 지급(안 제7조)
- 마.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안 제10조)
- 바. 지원대상(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나. 조례안예고: 2024. 02. 00 ~ 02. 00.(5일간)

## □ 제정조례안

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

###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논산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보험 및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질병 이외의 상해사고로 보험 보장사항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보험을 시와 계약 체결한 공제회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5. “시민안전사고 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이란 시민이 안전사고로 사망시 사망자(단, 만 15세 이상)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2장 시민안전보험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험 가입과 위로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보험의 주요 내용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피보험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보험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마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보험기관과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9호의3에 대해서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시가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

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기관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기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위배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위로금 지원 대상인 경우

제9조(자료의 수집·관리) ① 시장은 보험과 관련한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장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제10조(위로금 지원) 시장은 위로금을 지원할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제11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4조의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우선순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지원한다.

제12조(지원금액) 보험기관은 보험 약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13조(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은 위로금 지급 청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보험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청구하는 법정상속인은 제7조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보험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③ 보험기관은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위로금 지원 제외) 사망자가 제8조제1호,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조용훈 의원 등 8명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에 협조하여야 한다.